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 사 건 명 15-직권-00004 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 피 해 자 1. ○○○(▣▣▣▣고등학교 ○학년 학생)  
2. ◇◇◇(위 학교 ○학년 학생)  
3. □□□(위 학교 ○학년 학생)  
4. △△△(위 학교 ○학년 학생)
- 피 조 사 자 ●●●(위 학교 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는 피해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위 학교 급식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5. 5. 7.(목)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담배냄새가 나는 학생들을 지적하고, 며칠 뒤 점심시간에 위 학생들을 급식실 앞으로 오게 하여 위 학생들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기초조사 결과, 민원의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5. 20.(수)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달 21.(목) 관련자 면담조사, 관련 자료조사, 학생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해자들의 주장

2015. 4. 20.(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감독을 하던 피조사자가, 피해자들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지도를 하고,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음 날 급식실 앞으로 오라’고 했다.

2015. 4. 23.(목)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으로 갔는데, 피조사자가 우리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고 “불 안 붙이면 싸다구 때린다”고 하여, 맞지 않기 위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몇몇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 매우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 나. 피조사자의 주장

2015. 4. 20.(월) ○학년 야간자율학습을 감독하였는데, 지도를 하다가 담배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나는 학생들 4명을 적발하였다.

그 학생들 4명을 교무실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렇게 담배를 끊기가 힘들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 3.과

피해자 4.가 “죄송합니다”고 하여 반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다시 자율학습을 감독하다가 10반에 들어갔는데 교실 안이 시끌시끌해서 보니, 피해자 2.가 우유갑을 담배 재떨이 용도로 개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재떨이를 만들었으면 내일 급식실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자, 피해자 2.가 “알겠다”고 대답했다.

2015. 4. 21.(화) 급식실 앞에 가보았더니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고, 같은 달 22.(수) 2명의 학생들이 급식실 앞에 와 있어서 학생들에게, “내가 어제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한 후 학생들을 보냈다.

2015. 4. 23.(목) 급식실 앞에 학생들 4명이 모두 나와 있었는데 학생들이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서, 준비해간 담배(금연 지도를 하다가 압수한 것)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피해자 3.이 만든 우유갑을 재떨이로 사용하여 담배를 피우게 했다.

학생들에게 “싸다구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 학생들을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뉘우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학생회 임원들이 찾아와 임원들에게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했고, 당시 본인의 행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피조사자의 문답서, 피해자들의 면담기록,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4. 20.(월) 피조사자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4명의 학생들(피해자)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교무실로 불러,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고 말하였다.

2) 2015. 4. 23.(목) 피조사자는 피해자들에게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급식실 앞으로 모이자,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나눠 주었다.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머뭇거리자, 피조사자가 피해자들에게 “싸다구를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웠다. 위와 같은 상황을 당시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던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였다.

3) 2015. 4. 23.(목) 위 학교 학생회가 위 학교 인성인권부장 ○○에게 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학생회 임원, 인성인권부 교사들, 피조사자, 피해학생들이 모여 4차례 회의를 하였다. 같은 해 5. 20. 위 학교 ○학년 부장 ■■■은 ○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서 공개 사과를 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시하였으며 학교는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하였다.

## 나. 판단

학교는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흡연은 특히 건강에 해로운 우려가 있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학생 생활교육에서도 중점적으로 흡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흡연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일이나,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학생들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시킨 것은, 교사의 흡연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이른바 흡연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 피해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피조사자가 “싸다구를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고 이야기한 것에 공포를 느껴 강압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된 학생들의 수치심의 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조사자가 피해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학생

들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학생들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학교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 [별지 :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생략)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5) (생략)

나. (생략)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